

더민주 도당위원장 추대냐? 경선이냐?

오늘 오찬 모임 눈길... 정가 김춘진 주목·이춘석 의원 'Key Man' 역할 할 듯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위원장 인선이 마무리 된 가운데 누가 도당 위원장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합의 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경선에 따른 '부담'으로 의원들간의 추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 시국이 우세하다.

그러나 2017년 대선 이후에는 대규모 정계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일대 격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로는 김춘진 김제부안 지역위원장과 김은덕 전주갑 지역위원장, 이상직 전주을 지역위원장, 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김제부안 김춘진 지역위원장이 도당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3선으로서 중앙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의정활동 성실도면에서는 단연 으뜸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번 지역위원장 경선

에서 조직력이 빛을 발휘하면서 그동안 뒷심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많았지만, 그는 평이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추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29일 지역위원장 인선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오찬 모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날 '추대와 경선'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완주·무진장 지역위 정기 지역 대의원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안호영 의원)는 28일 오후 정가지역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진안 문화의 집에서 열린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안호영 지역위원장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역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역 당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성공했지만 전북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고 말한 뒤 "오늘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대의원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향후 지역위원회의 모습에 대해 3가지로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위원회 ▲정권감찰에 앞장서는 지역위원회 ▲당원과 함께 발전하는 지역위원회를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백남기대책위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최근 상태가 매우 나빠져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민석 '이종걸 출마하면 계파갈등 부채질 우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종걸 의원의 당대표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지금 진정돼가는 집안싸움과 계파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tvN '열린 아침 김만홍입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시종일관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미애·송영길·김성곤은 범주류 내지는 주류 쪽에 속하는 인물들이고 말하자면 법치노 혹은 법치문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종걸 의원이 출마하면 비주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출마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싸움 자체가 주류 대 비주류 내지는 법치노·친문 대 비노·비문 이렇게 갈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출마하지 말라고 간곡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유은혜 '전국여성위원장 되면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요구'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일 정무간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른 지원 제단 출범과 관련, "당 전국여성위원장이 되면 제일 먼저 여성 당원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정부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민주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식 출범한 위안부재단도 인정 불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단이 설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여당보다 먼저 나서서 위안부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한일 합의 무효를 전 국민적 힘으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전국여성위원장에 출마하며 "여성이 참여해야 세상이 바뀌고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당헌 제8조(예 규정된) 여성당원 공천 30% 지키는 것부터 실현하겠다. 전국 여성당원의 지위를 높이고 권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야3당,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긍정적 "흠집내기 중단하고 부패척결 노력해야"

야권의 3당이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오래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합헌 결정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일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 축소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며 "현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치권은 김영란법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부패척결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추미애 "박 대통령 탈당·중립내각 구성을"

"당대표 되면 공정한 대선 경선 이끌겠다... 사드는 백해무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내각 총사퇴 후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후보등록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개입한 유례없는 관권선거였다. 이번 대선에도 이와 같은 현정질서 파괴행위가 지속된다면 정권교체의 희망도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권통합에 관해선 "우리 당의 강력한 통합이 먼저다. 3차 대결을 한다 해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야당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닌 국민을 위한 통합, 국민에 의한 통합이 승리하는 야권통합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선 "공정한 대선후보 경선을 위해 경선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겠

다"며 "대선 경선 규칙 마련을 위한 원탁 회의를 구성해 중립적이고 신망 있는 의 부인단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과 대선후보가 공동으로 집권하고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이 실행하는 검증된 인재를 발굴해 집권 후까지 국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당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개헌에 관해선 "국민들의 안전·노동·인권·행복추구권·한반도 평화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며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대선승리를 위한 집권정당의 비전을 보여 주고 집권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민주정책연구원의 대선 정책지원 TF 전환 ▲지구당 부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추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대동

령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 주장과 관련, "지난 총선은 대통령이 직접 '표발'을 방목해서 배반의 정치 운운하고 선거에 깊숙히 개입한 총선이었다"며 "이번 상태로 내년 대선을 공정히 치를 수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총선 1년전까지는 공정한 대선을 국민에게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 "사드 배치는 명백히 반대한다. 사드 배치는 외교·경제·군사적으로 패착이자 실수며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이것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선거가 친문 진영의 구애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저는 한 번도 어느 세력에 가담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지난 21년 간의 제 정치 족적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한 자신의 강점에 대해선 "정권교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바닥지침을 두텁게 해야하는데, 제가 중심추 역할로서 당의 바다 다지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열에 맞서왔고 통합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저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도의회 교육위, 우레탄 트랙 현장 점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28일 우레탄이 설치된 학교현장을 찾아 학생 안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교육위는 남 검출이 이뤄지지 않은 정읍 왕산여중과 정읍고를 방문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우레탄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레탄이 아닌 코르크를 이용해 운동장 트랙을 설치한 전주운빛초를 찾아 중금속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장명식 위원장은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운동장을 오래동안 이용했다는 것이 놀랍고 안타깝다"며 "방학 중에 신속하게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최인정 의원은 "납 검출이 시범서나 설계상 문제인지, 작업 과정상의 문제인지, 원재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인지 등에 대한 꼼꼼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규와 업무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양용도 의원은 "시공 업체의 잘못이 있다면 고발을 하거나, 제거와 재시공 비용을 관련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시공 과정에서 업무 과실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강병진 의원과 조병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예산투자로 납중독 우레탄을 제거할 것과 추후 안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레탄은 재료에 중금속이 포함된 경우와 노후화될 경우 열화현상으로 중금속이 약해져 가루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가루가 호흡 또는 피부 접촉 등으로 체내로 들어가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북은 144개교 중 98개 학교에서 납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신광영 기자

박재만 "송전선로 특별지원사업 중단"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군산-새만금간 송전선로 건설공사 피해 주민을 배제하고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선심성 특별지원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현재 군정에너지와 한화에너지, OCI SE 등 석탄발전소가 완공되거나 증설 중에 있고 OCI 투자중단 및 글로벌경제 침체에 따른 GM대우자동차와 현대조선소의 산업중단으로 인해 군산의 전력량이 남아돌아 송전탑건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의원은 이어 한국전력의 송전탑건설 공사 특별지원 사업비가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지원 사업비 합의과정에서 현실적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들은 배제되고 있어 주민들 간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송전탑건설 공사 특별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부라마다 3억~4억씩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는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선심성 지원을 중단하고 특별지원사업비가 송전탑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

안철수, 사당화 논란에도 '마이웨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사당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당 상당수 의원들은 안 전 대표의 1인체제로는 당의 미래가 없다고 성토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안 전 대표는 '별반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의 통화에서 "안 전 대표는 말 그대로 당부에서 한 걸음 물러난 상황"이라며 "당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일일이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의회에서 "우리당이 안철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안 전 대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국민의당을 안철수당으로 만들면 당도 어려워지고 정권교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대다수가 안 전 대표에 대해 노골적으로 각을 세운 바 있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서 이같은 의총 분위기가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법 하지만, 공개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곤란한게 사실이다.

4·13 총선에 안 전 대표가 전면에서 나서면서 사실상 당 분위기를 주도해왔고, '김수민 사태'로 논란이 된 비례대표 공천 역시 안 전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였다.

아울러 국민의당의 사드배치 반대 당론 역시 지난 10일 안 전 대표가 성명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했었다.

당시 당내에선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의총에서 쏟아진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면 소속 의원들의 반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뉴시스